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재원 | 공주대학교 교수

I. 고령화 현황과 전망

우리 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5년 현재 9.1%이며 2010년에 10.9%, 2018년 14.3%, 2050년 37.5%의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부담으로 이어져 2005년 약8명당 노인1명부담에서 2050년에 1.4명당 노인1명 부담으로 나타남.

2005년 현재 충남도의 노령인구 구성비는 14.4%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간 노인인구 구성비를 보면(2005년) 서울 71%, 울산 5.2%로 낮은 반면, 전남 17.5%, 충남 14.4%, 경북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해 있음
- 또한 노인부양비도 전남 27.3%, 충남 21.5%, 경북 21.0%로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령인구구성비를 보면 군부의 경우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해 있으며, 특히, 청양군, 시천군 등 과소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고 부여군도 초고령사회에 근접해 있음
- 시부도 천안시와 계룡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도달해 있음

II.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

저출산·고령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부정적인 분과 긍정적인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표 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

구분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복지적 측면	
내용	사회전체의 부담증가 노인의 사회적 소외/배제 - 세대간 갈등과 사회적 통합 저해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 정보격차 등을 통한 계층간 노인계층내의 양극화 심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동생산력 하락과 경제성장률 둔화 - 저축률 하락 - 세입기반 감소 - 공공재정악화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위협 - 의료 및 장기요양 비용의 증가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부담증가	건전한 새로운 노인문화 형성 - 노인의 정치적 압력 집산화 - 노인의 일반식 경제력 향상 - 실버산업의 발전

Ⅲ. 저출산·고령화 해결 방안

1. 범정부적 정책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대책과 지방정부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2. 충청남도 특수(독자)사업 방안

1)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수립

정부의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바지플랜 2010)의 지방적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고령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각종 조례제정 및 제도 정비

저출산, 고령화문제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 마련해야 한다.

3) 가정·지역·학교·기업·정부(행정)간의 연계 체계 구축 운영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각 주체들간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보육 및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보육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며 특히 시설확충을 통해 서비스 센터로서 기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5) 특수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지역사회중심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세대간 세대대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노노케어, 고령인력을 활용한 양육프로그램
살시(어린이집과 연계, 지역아동센터 연계, 방과후 또는 주말 학습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재가복지서비스 강화로 「24시간 안심서비스 프로그램」 추진

소지역사회의 모임의 광장 확충 및 활성화

-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운영

노인보호구역(살버존) 도입,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차량 살버마크 제도 도입, 은퇴자마을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표 2〉 범 정부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구분	내용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출신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을 증진증까지 확대	○	○
	- 명백후 학교 확대	○	○
	- 자녀양육기 장애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
	- 자녀양육가 장애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
	- 임양이등 양육지원	○	○
	- 보육시설확충	○	○
	- 보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 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원 확대	○	
	- 육아휴직지원 강화	○	
	- 출산,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	○
	- 양성평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	○	○
건강한 미래세대육성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
	- 아동·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	○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퇴직연금제도조기 상환, 개인연금활성화)	○	
노후건강관리 및 요양보호 기반확충	- 사전예방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	○
	- 노후 의료보장 강화 및 노인운동 활성화	○	○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및 노인요양인프라 구축	○	○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체계 구축	○	○
노인사회참여 기반 조성	-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
	- 노인여가, 문화활동 지원	○	○
	- 노인권리증진 및 효문화조성	○	○
안신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	- 안전한 노인주기공간 확보	○	○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	○
	- 농어촌 노인복지기반 확충	○	○
여성고령인력 활용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지원	○	
	- 연금차별금지법제화	○	
고령친화산업육성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고령친화제품기술개발)	○	○